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고사

□ 문제수 및 고사 시간

문제수	시 간	배 점
3	10:00~11:40(100분)	[문제 1]은 총 점수의 34%, [문제 2], [문제 3]은 각각 33%

□ 수험생 유의사항

- 답안지에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번호를 정확히 명기
- 계산기와 통신기기 등은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
- 답안지는 1매만 사용해야 하며, 2매 사용 시 무효(0점) 처리
-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
(볼펜, 사인펜 사용가능. **연필, 샤프,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 문제지의 여백은 연습장으로 활용 가능
-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 **답안 작성 시 0점 처리 기준**
 - 답안지에 답 이외의 특정 표기나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시를 한 경우
 - 검은색 필기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수정이 가능한 연필류 등으로 작성한 경우
 -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
 - 답안지의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문제 1] 다음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가 말하고 쓰는 모든 단어가 사전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사전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행어 사전’과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전이 아니라면 단어로서의 자격을 안정적으로 확보(確保)한 단어가 사전에 등재(登載)되어야 한다. 아무리 널리 사용되는 단어라 해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유행어라고 하면 사전에 오를 자격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얼짱’은 사전에 오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얼짱’이 유행어인가 아닌가에 따라 갈라진다. 이 단어는 2002년 ‘신어(新語) 자료집’에 올랐고 지금까지 쓰이고 있으므로 유행어라고 하기에는 생명이 길다. 그렇다면 ‘얼짱’은 계속 명맥(命脈)을 유지(維持)하면서 사전에 등재될 자격을 획득(獲得)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지극히 어렵다.

판단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이 단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외모 지상주의 열풍에 휩싸인 사회 분위기에 편승(便乘)해서 퍼진 말이 ‘얼짱’인데 과연 그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인가? 이에 대해 필자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그런 말을 쓸 일이 없어질 것이다.

다음은 단어의 구성이다. 단어의 구성이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없으면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얼짱’은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다. 익히 알려졌듯이 이 말은 ‘얼굴’과 청소년층에서 속어로 사용하는 ‘짱’이 결합된 말이다. ‘얼굴’에서 ‘얼-’을 분리하는 조어(造語) 방식도 국어에서는 매우 낮은 방식이다. 이것만으로도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더구나 속어와 결합한 말이다. ‘얼짱’이 널리 퍼졌다 해도 ‘짱’은 여전히 청소년층의 속어로 남아 있다. 속어는 자연스럽게 아무 자리에서나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말이다. 물론 그러한 부담을 극복하고 사용 영역을 넓혀 가는 속어도 없지는 않다. ‘얼짱’은 신문에도 종종 등장한다. 그만큼 거부감이 많이 희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의 자연스러운 대화에서도 거리낌 없이 등장하는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얼짱’이 유사어인 ‘몸짱, 씹짱, 껌짱’ 등을 만들어 내고 있으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사어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말이 사라진 사례는 많다. 유사어가 많다는 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얼짱’은 잠시 사용되는 유행어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마치 일제 강점기에 한 동안 쓰였던 ‘모던 보이(modern boy)’, ‘모던 걸(modern girl)’ 정도의 지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얼짱’은 사전에 오를 만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방언은 크게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 지역 방언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사회 방언으로 구분한다. 사회 방언은 복잡한 형태로 존재한다. 같은 계층 내에서도 대화 참여자의 연령이나 성별, 지위, 종교에 따라, 혹은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말하기 태도의 변화에 따라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상황적 문맥의 지배를 받는 언어 표현인 높임법이나 격식적·비격식적 표현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남학생 : 어제 만두집에 들어가는데, 왁 샘이 지나가잖아.

여학생 : 그래서 어캐 댔어? 생깁어?

남학생 : 말밥이지. 야자 땡땡이친 거 뽏록 나면 주금이거등.

위의 예는 요즈음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언어의 예로서, 계층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 방언 중의 하나이다. 사회 방언은 그것을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며,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 방언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사회 방언에는 연령어, 성별어, 직업어 등이 있다.

연령어는 세대 간 차이에 의한 것과 연령별 언어 차이에 의한 것이 있다. 즉 노인과 청년층의 언어가 다르고, 한 개인이 젊었을 때에 사용하는 언어와 나이가 들어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다.

성별어는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이 달라서 생기는 것으로, 억양, 말투, 어휘 등에 있어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가 차이를 보인다.

직업어는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일의 생산성을 높이고 직업의 전문성을 나타내 준다. 의사들의 언어, 판사들의 언어, 교사들의 언어, 요리사들의 언어, 군인들의 언어, 심마니들의 언어 등 다양한 직업어가 있다. 이들 직업어는 특정 직업이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특수한 용어로 전문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같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

<세계 인권 선언문>

국제 연합의 여러 국민은 이미 ‘유엔 헌장’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확인했고, 좀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이러한 서약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 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서약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국내적·국제적 조치로 회원국 국민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키우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한다. 이에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서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이 있으니 형제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

【제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속한 나라 또는 영토가 독립국이든, 신탁 통치 지역이든, 비자치 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곳의 정치적 지위나 사법 관할권상의 지위나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어느 곳에 사는 주민은 지위가 높고, 다른 곳에 사는 주민은 지위가 낮다는 식으로 구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중략>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가르침, 실천, 예배, 의식에서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기의 종교나 신념을 밝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1.1] 제시문 (가)의 논지를 3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300±15자)

[1.2] 제시문 (나), (다)의 관점에서 (가)에 내재되어 있는 필자의 언어의식을 비판하시오. ‘사회 방언’, ‘언어적 다양성’, ‘평등’, ‘자유’를 핵심어로 반드시 사용하여 600자 내외로 작성하시오.(600±30자)

[문제 2]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 (마)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려 시대에는 재산 상속이 아들딸 구분 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다. 첫째라고 더 많이 받거나, 아들이어서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은 『고려사』에 나오는 경상도 안찰사 손변의 일화이다.

손변이 송사를 맡았는데, 남동생이 “다 같은 부모의 자식인데, 어찌서 유산을 누이 혼자서 차지하느냐?”라고 말하자, 누이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집안 재산을 모두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였다. 손변이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다 같은 법이다. 어찌 장성해서 이미 출가한 딸에게만 후하고, 어미도 없는 어린 아들에게는 박하게 하겠는가?”하며 타일렀다. 누이와 동생이 비로소 깨닫고 서로 붙들고 울었다. 결국 남매는 재산을 반씩 나누어 받았다.

(나)

홍길동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투표소는 2층에 설치되어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간 홍길동 씨는 안내원에게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안내원은 “내년이나 하세요.”라며 통명스럽게 말했고, 홍길동 씨는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다. 이후 홍길동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

다문화 사회는 첫째, 미국처럼 처음부터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가 융합되어 만들어진 사회, 둘째, 사회나 국가 형태가 갖추어진 후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종·종족·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사회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이주의 물결은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이주 여성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적 구성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인적 구성의 변화가 곧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사회 제도,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도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이 계획·실행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의식도 함께 바뀌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그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다문화 정책이 주로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민과 한국인이 상대방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

자민족 중심주의는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관점이다. 자민족 중심주의는 자기 민족의 문화에 대한 자기애(自己愛)가 지나쳐서 자기 민족의 문화에는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지만, 다른 민족의 문화는 폄하하며 거부하거나 불쾌하게 여긴다. 즉 자민족 중심주의는 다른 문화와 접촉할 때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며, 배타적 민족주의나 인종 차별주의 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적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차별이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구분하여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특정 기회를 제한하는 성차별, 인종이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종차별, 특정 종교를 배척하는 종교차별 등이 있다.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사회집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인종에 따른 차별이 나타나고, 자신과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신체적·정서적·언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직장을 비롯한 여러 사회 집단에서도 임금차별,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차별이 나타나기도 한다.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다름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가진다면 결국 구성원 간의 불신이 깊어져 사회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제시문 (가), (나), (다), (라), (마)를 활용하여, ‘평등 사회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600자 내외로 작성하시오.(600±30자) 다섯 개의 제시문을 빠짐없이 사용하되, 글자 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시오.

[문제 3]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국가 생활에서 기본권 행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며,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제가 인정된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은 그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만일 기본권 제한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면, 독일의 히틀러가 제정한 뉘른베르크법(1935년)처럼, 어떤 법률이든 만들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고, 국민의 기본권 규정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은 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권 존중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제한을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한의 방법도 적절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헌법에 기본권 제한의 규정을 둔 목적이 제도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만 기본권을 제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나)

오늘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참여 주체는 아무래도 시민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실현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법치 민주 국가에서는 대표자에 의한 대의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의 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선거는 민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민은 선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시민의 개인적인 참여 방법으로는 스스로 정치인이 되어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언론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정 기관에 진정이나 건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집단적인 참여 방법으로는 정당이나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에 관여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방법,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이 있다.

(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모델을 참고하여 설치한 것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헌법 재판 기관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침해를 구제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 위헌 법률 심판과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인 헌법소원 심판을 담당한다. 헌법소원 심판은 다시 권리 구제형과 위헌 법률 심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인구분포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선거권의 가치에 대한 다툼은 전자의 한 예가 된다. 헌법소원 심판의 결과,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권력 작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다. 법령이 이 같은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은 제정기관을 통해 폐지되거나 개정되게 된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를 사후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은 다양한 종류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평등권, 참정권 등이 있다. 먼저 헌법 제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평등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 하되, 개인이 지닌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동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달한 자는 선거권, 국민 투표권 등을 보장받게 되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의 대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평등권과 선거권은 각기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선거권은 평등하게 작용하였지만, 선거권의 가치가 불평등하게 평가되는 특수한 경 우가 있다. 가령 동일한 선거구에서 선거를 하는 사람의 선거권에 차등을 둔다면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각기 다른 지역에서 선거를 평등하게 하였으나 인구분포의 불균형으로 선거권의 가치가 일정 비율 달리 평가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선거권과 평등권, 기본권의 제한과 침해된 기본권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래 <보기>의 자료를 소재로, ‘선거권의 가치에 있어서 불평등의 한계, 불평등이 심할 경우 유권자가 담당 기관을 통해 행할 수 있는 법적 구제의 방법’을 제시문 모두에 근거하여 800자 내외로 작성하시오.(800±40자)

<보기>

인구밀집 지역인 경기도 OO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선거구의 사람 수가, 특히 인구분포가 낮은 농촌지역 선거구의 평균 사람 수에 비해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여, 지방 선거에서 공평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 하며 권리를 구제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